

건설소식

CONSTRUCTIONNEWS

입찰담합 “꿈도 꾸지마”

공정위, 징후분석시스템 연계 확대

| 정부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 주택공사 등 대규모 발주처인 4대 공사 전자입찰시스템과의 연계가 완료돼 향후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대규모 발주처인 한국전력,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4대 공사의 전자입찰시스템과의 연계작업을 완료,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초부터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달받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가동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찰률과 참여업체 수 등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조달청 및 4대 공사와 연계해

운용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시스템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개선사업도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 시행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입찰 관련 정보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쉽게 입수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 제출정보의 범위와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정보제출기관,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대상 입찰의 범위는 일반공사 50억원 이산, 정보·통신공사와 물품구매 및 용역입찰은 5억원 이상이며 제출대상 정보는 현행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정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사후관리 시스템 내년 가동

처분 형평성 논란 사라지나

| 처분기관별로 들쭉날쭉한 건설업체 제재수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 발주청 등 기관별 처분의 세부 내역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로서는 억울한 과다 처분 피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반면, 처분기관에 대한 불법 로비를 통한 제재수위 약화 시도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부실시공, 뇌물 수수혐의 건설사에 대한 잇따른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전면조사

내년부터 지자체, 발주기관별로 내리진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 말소 등 건설업체 처분내용에 대한 정부의 전면조사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5월 개정, 공포(내년 1월 1일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3항의 건설행정 지도·감독 신설조항에 따른 것이며, 건교부는 내년 초 이를 위한 세부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설 조항은 '건교부 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체 처분은 지자체, 발주기관이 내리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건교부의 고유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하고 있는 것일 뿐 실제 처분 주체는 건교부"라며 "위임된 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



추울 때 술을 마시면 따뜻해진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실제로 몸이 따뜻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러시아에서는 특히 겨울철에 독한 술인 보드카가 많이 팔린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선 보드카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못지않은 음주 초강대국 한국에서도 역시 겨울철엔 독한 술이 많이 팔린다. 하지만 이는 위험하기까지 한 그릇된 통설이다.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가면 모세혈관이 활짝 열리면서 피부로 피가 몰린다. 자연히 피부를 통해 많은 열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마치 온몸이 따뜻한 것처럼 느껴지며, 기분도 좋아진다. 하지만 반대로 몸속은 차가워지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왜 그럴까?

사람은 체온을 36~38℃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恒温동물이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로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려고 하면 반사적으로 우리 몸은 체온을 정상으로 회복하려 한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열이 많이 나면 땀을 흘려 체온을 식힌다. 또, 바깥 날씨가 추워지면 주요 장기의 온도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혈액이 몸속 가운데로

흘러 들어간다. 하지만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임상약리학과 과장인 헤인즈(William Haynes) 박사는 우리 몸속으로 알코올이 들어오면 이런 기능이 마비된다고 설명한다. 즉, 바깥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피가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 장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초혈관에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겨울철에 음주 동사자나 음주 익사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겨울철마다 러시아에서는 만취한 남성들이 거리에서 동사했다거나,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지거나 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기사가 신문 지면을 장식하곤 한다. 음주 후에는 냉수 샤워도 금물이다. 술에서 깨기 위해 냉수 샤워를 하면 졸음은 쫓을 수 있지만, 음주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몸속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찬물까지 끼었다가 자칫 변을 당할 수도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도 많으나, 탄산음료는 술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술에 더 빨리 취하게 할 뿐이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

고 있다면 정부가 감시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법령상 지도감독 규정이 미흡해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개정 건산법 조항이 발효되면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처분 적정 여부도 조사

건교부는 기관별로 내려진 처분실태 뿐 아니라 그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재심사한 후 필요할 때 시정까지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재심사는 처분에 이은 사후적 관리수단으로 이용되는 탓에 과다·과소처분 예방효과만 발휘할 뿐 이미 내려진 처분을 되돌리는 효력은 없다.

이 방안은 최근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영업정지 7개월 처분처럼 처분기관이 법령상 규정을 임의로 해석, 과다·과소처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처분기관 불법 로비를 통해 건산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뇌물수수, 부실시공 등의 사례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거나 과징금만으로 피해가는 행태까지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발주기관별로 건설업체 처분권이 과다·과소

행사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후관리할 계획”이라며 “법령에 어긋나는 제재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기관과 협의해 조정하되 필요하다면 추가적 강제수단은 물론 처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대책까지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실공사 원인조사 내실화

영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사고 원인조사도 내실화된다.

건교부는 내년 5월 말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되는 사고조사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내년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에 따라 운영될 위원회는 중대 재해 발생현장의 사고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중복 조사로 인한 건설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와 노동부 주관의 중대 재해 발생 현장 조사는 통합·운영하는 방향으로 조울됐다.

사망 1명, 부상 2명 이상이 발생한 현장에 적용되는 노동부 주관의 현장조사에 사고조사위원을 파견·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건교부가 넘겨받아 별도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건교부 본부 차원의 별도 사고조사위를 구성, 정밀조사 한다.

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시설물 사고라도 원인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가 개입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고조사위의 1차 역할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라며 “그러나 부처간 이견 속에 적기에 취합되지 못한 건설현장 사고 및 처분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건교부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 형평성 부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 기능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고용보험
46.8%만 집행**

제조업 보다 30%나 낮아

지난해 건설업에서 거둔 고용보험료 가운데 건설업에 다시 실업급여 등으로 지원한 보험료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관리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건설업에서 걷어 들인 고용보험료는 5천492억2천900만원에 달했다. 그러

나 이 가운데 지난해 건설업 종사자들을 위한 실업급여지급, 고용안정사업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등으로 다시 지출된 보험료는 2천571억9천569만원으로 보험료 집행률이 46.8%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건설업의 이같은 집행률은 2005년 33.2%에 비해 13.6%p 증가한 것이지만 전 산업 평균 74.7%, 제조업 76%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05년과 2006년 2년동안만 건설업에서 징수하고도 사용하지 않아 쌓인 보험료가 6천700억원을 넘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2006 고용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 건설업에서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은 23만3천13개소였고, 이 가운데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9%를 차지했다.

하도급비리 많이 줄었다

처분 25건 그쳐...
등록기준 미달도

| 올해 하도급비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건수가 급감했다.

또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처분업체 역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들어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9월 말 기준)하도급비리로 처분받은 건설업체 수는 25곳으로 지난해(연말 기준 609건)의 4% 수준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이 67건(일반 5건, 전문 62건)에서 16건(일반 6건, 전문 10건)으로 줄었고, 과징금 처분이 542건(일반 22건, 전문 520건)에서 9건(일반 3건, 전문 6건)으로 급감했다.

올해 처분건수 면에서는 무등록업체 재하도급이 10건(영업정지 6건, 과징금 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괄하도급 8건(정지 6건, 과징금 2건), 해당업종 업체 재하도급 7건(정지 4건, 과징금 3건)순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 여파로 인한 기저 효과도 있지만 8·15 대사면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면 대상에서 빠진 등록기준 미달처분 건수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건수는 지난해 8,270건이었고 올해(8월 말 기준)도 2,618건으로 만만치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처분건수 면에서는 보증가능금액 미달이 1,516건으로 최다이고 기술인력(679건), 자본금(292건), 시설 및 장비(131건) 미달처분이 뒤

를 이었다.

그러나 건교부가 현재 취합 중인 직접시공 위반업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는 사면기간에서 제외되는 2006년 하반기 이후 실적신고분을 토대로 직접시공 위반업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위반업체를 처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 받는 대로 세부 검토를 거쳐 연내 처분기관별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처음 도입된 직접시공의무제의 추가 확대 문제는 제도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배관망 건설 지원확대

정부, 고유가시대 대응방안 마련

|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에 대한 용자와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자금 용자가 확대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 보일러 교체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이 확대되는 등 에너지 소비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책

이 추진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유가상승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방향을 담은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가스배관망 건설에 대한 용자를 확대, 지방도시에도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배관망 건설에 따른 용자를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에는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설치비의 80%(20억원)범위 내에서 3년 만기 국채금리 수준의 저리로 용자해 주기로 했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자금 용자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도 설치자금 용자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4,837억원에서 6,837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치자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금리를 1.5%p 인하하고 특히 중소기업에는 지원비율을 투자비의 90%에서 전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나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만8,000가구, 2011년 까지 10만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를 대상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간이 난방시설 보급 등 난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 6만 가구에 대해 고효율 조명기기를 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응방안에 대해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 등 일시적인 가격 부담 완화보다 에너지절감, 석유시장 유통구조 투명화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선별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엔지니어링업계, 5년후 세계 7위 진입 목표

과학기술부는 제2차 엔지니어링 기술진흥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전문건설회관에서 엔지니어링관련단체 및 업체 임직원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계획안은 선진국에 비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을 2012년 세계 7위 수준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지원과 관련법령·제도 정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 5개 전략분야의 13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추진전략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글로벌

환경대응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정비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R&D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원천기술 확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인프라 혁신 등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강화 △해외시장정보의 체계적인 조사 분석 및 운영 △엔지니어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등 중점추진 과제를 시행한다.

또 법·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관련지원정책, 제도의 부처간 연계체계 구축 △엔지니어링 사업 환경 국제화 및 선진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엔지니어링산업 생산성 향상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급전문인력 확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시장수요를 반영한 엔지니어 수급체계 확립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미래원천핵심엔지니어링 R&D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촉진 및 지원을 돕기로 했다.

이밖에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인프라혁신을 위해 정보유통기반의 확충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기술허브를 구축토록 했다.

과기부는 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